

내년 예산, 4대 핵심분야 집중 투자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4차 산업혁명 대응·양극화 완화·저출산 극복·일자리 창출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4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대 핵심분야는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이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를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영, 미래 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19년 예산 대비 50%를 넘어서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 재정소요도 거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여력을 확보,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지침안에 담았다.

'단골 손님'인 일자리 창출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잡은 것은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찬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사업과 저출산 극복 사업은 카테고리 가 대부분 정해져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는 명확한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예산실과 각 부처가 4~5월 중 어느정도까지 관련 부주로 정할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축구화의 가격과 품질 비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지실에서 축구화의 가격과 품질 비교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축구화 13개 제품 중 2개 제품(1개 브랜드)은 깔창 부분이 다른 제품과 마찰에 의해 열로가 이열될 우려가 있고, 4개 제품(3개 브랜드)은 갑피와 안감 부분에서 마찰에 견디는 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정부 재정은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쪽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4대 핵심분야에 투자할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 요구 시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으로 인해 기존사업을 폐지하거나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은 신규사업의 경우 10년짜리 재정 소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출해야 할 지출계획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융합예산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수출·R&D 3대 분야는 성과중심으로 재정 사업을 재편할 예정이다.

약 60조 규모에 이르는 전체 보조사업 전면점검을 시행해 지속 지원, 감

축, 폐지할 계획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용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 강화,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 재정 효율화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번 지침은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대우조선, 답 정해 놓은 금융위

시중은행·국민연금 참여 강조... 강제력 동원 업포도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세워둔 방안에 고객의 돈으로 운영되는 시중은행과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참여를 강조했다. 때문이다.

특히 대우조선 정상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한 방법을 쓰겠다는 업포도 밝혔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내 대답만 해'라는 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금과 시중은행에 출자전환과 상환유예 등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규지원과 출자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3900억원의 채권과 시중은행의 무담보채권 80%(5600억원)을 출자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시중은행에는 1400억원 채무를 5년 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이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서도 이를 추진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인 프리 패키지 플랜(P-플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P-플랜이 적용될 경우 대우조선으로 인한 금융권 손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시중은행은 금융위 방침에 조건부 동의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조건으로는 '채권자 역시 대우조선 출자전환에 동의하는 것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을 출자전환하고 상환을 유예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임 위원장 역시 이 같은 지적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3900억원의 출자전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나오기 전 정부와 상의된 바는 없었다"며 "기금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융위와 산업부는 관련 내용에 충분히 합의를 보지 못한 모양새다. 대우조선으로 인한 손실 규모에 대한 두 기관의 추정액 차이가 3배 이상 차이났다.

또 주영환 산업부 장관은 대우조선 지원인과 관련된 경제현안점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불참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금융위와 산업부가 엇박자를 내는 분위기에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이 지원하는 느낌"이라며 "1년5개월 새 13조원 투입하고 정상화 된다고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답을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통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정상화를 이루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항공사, 비행일정 당일변경 어려워진다

자연·결항 최소화 기대...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30일 시행

아니더라도 항공기를 결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계획을 당일에 변경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천재지변과 기상악화, 항공기 점검관계, 테러나 전염병 발생, 항공기 허가 지연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지도 의무화한다. 항공이 운자가 열람을 요구했을 때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항공안전도 강화한다. 승무원 피로 관리 시스템과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도 새로이 신설할 계획이다.

항공기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2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갖춘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조

종자 자격증명도 구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뒤 60여차례 부분 개정됐지만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항공법을 사업과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하고 한층 전문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공법 개편으로 항공운송 국제기준과 항공산업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도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LS 투자자, 숙려기간 이틀로 확대

4월부터 확대 적용... 70세 이상·안정 투자자 대상

다음 달부터 안전성향이거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추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2일(영업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4월부터 숙려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은 80세 이상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인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하루 정도 숙려기간을 준다.

4월부터는 숙려제도 대상이 70세 이상과 안정 성향 투자자로 확대되고 기간도 이틀로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2일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고 숙려기간 동안에는 청약할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모 방식의 투자와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는 제외된다.

금융원은 또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 방법 등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뉴시스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